EU 공급망실사 지침 주요내용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장 명 화 (clarajang@kdb.co.kr)

◆ EU집행위는 2.23일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을 발표
- 실사 적용대상 기업의 공급망 전체에 걸쳐 인권 및 환경 관련 실사를 의무화,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수립 및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도 허용할 것을 제안

◆ EU 회원국의 적용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전망이나,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중요도 확대에 따라 국내 기업도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

□ EU집행위는 2.23일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마련

○ '21.3월 EU의회*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기업의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채택

* EU 회원국 인구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705명의 의원(임기 5년)으로 구성되며, 입법안을 수정·거부할 수 있는 공동결정권 및 감독 통제권, 예산결정 권한 등을 보유

○ EU집행위*는 의회 결의안을 반영하여 '22.2.23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을 발표

* EU의 정책 및 법안 제안·개발, 재정관리 등 행정기능과 대외협상에서 대표기능 및 협상자 역할 (구성 : 집행위원장은 EU이사회 및 EU의회가 임명, 집행위원은 각 회원국이 1명씩 차지)

- 적용대상은 역내 대기업 및 역내에서 활동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非 EU 기업
- 중소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대기업의 공급망 실사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집행위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재정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인권 및 환경 관련 공급망 실사 지침 적용대상

구분	기준		대상기업 수		비고
	직원수	매출액[1]	EU 대기업	비 EU 기업	
그룹1	500명 초과	1.5억유로 초과	약 9,400	약 2,600	▪ 중소기업 적용 제외 ▪ 그룹2는 그룹1 적용 2년 후 적용
그룹2	250명 초과	4천만유로 초과 (고위험업종[2] 비중이 50% 이상)	약 3,400	약 1,400	

주1 : EU 기업의 경우 전세계 매출액 기준, 비EU 기업의 경우 EU 역내 매출액 기준
주2 : 섬유 및 가죽, 농림어업, 식품, 금속 및 비금속 합금 제조, 기초·중간 광물 원자재 채굴 등
자료 : EU Commission

□ 동 지침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은 공급망 전체에 걸쳐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

○ 동 지침은 대상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실사의무, 위반시 벌금 등 행정제재,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 허용 등을 포함

- 대상기업은 자사의 활동, 자회사 및 공급망 전체에 대해 실사의무를 이행
- 실사내용에는 ▲기업정책에 공급망 실사 의무 반영,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평가, ▲실질적·잠재적 영향의 예방·제거·최소화, ▲피해 구제절차 마련 및 유지, ▲실사정책 및 조치 효과 모니터링, ▲실사의무 이행 내용 공개 등이 포함

○ EU집행위는 동 지침을 통해 기업들의 노동 및 환경 관련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하고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EU 회원국의 적용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전망이나,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중요도 확대에 따라 국내 기업도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

○ 지침안은 EU의회 및 이사회와 1년여 기간의 협의를 거쳐 승인될 예정이며, EU 회원국은 지침 발효 후 2년 이내에 국가별로 법률을 마련하여 적용

- EU의 지침(Directive)은 개인·기업이 아닌 회원국을 구속하기 때문에 회원국별 입법과정이 필요하고,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회원국마다 다를 가능성
  ·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공급망 실사에 대한 법률을 이미 도입했거나 준비중*

* 프랑스('17년 시행), 독일('23년 시행예정), 네덜란드('22년 시행예정, 아동노동 분야)

** 프랑스의 경우 실사법안 'Duty of Vigiliance Law'에 따라 의무 준수 지연시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22.3월 현재 Total(정유사), Teleperfomance(콜센터), XPO Logistics(물류회사), EDF(발전사), Suez(상수도사업자), Casino(유통사)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훼손, 노동자 인권침해 등에 대한 7건의 피해보상소송('22.3월 현재)이 계류 중

○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보호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적용 범위는 점차 확장될 전망으로,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선제적인 공급망 관리와 실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